

선불충전금 기록 관련 빅브라더 논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.

- 한국경제tv 3월 1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한국경제tv는 3.18일 「“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” ... 빅브라더 논란 재점화」 제하의 기사에서, “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·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... 금융위원회도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. 예를 들어 페이를 통한 거래 정보를 금결원 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” 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‘23.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었으며, 선불충전금 잔액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관하여 해킹 등 비상상황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선불 충전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선불충전금 내역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이 제공받거나,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*,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사정을 알고도 제3자에게 제공받는 행위 금지(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 등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상록 (02-2100-2620)
		담당자	사무관	최승희 (02-2100-2621)